



Online Series

2015. 9. 10. | CO 15-23

9·2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기현(국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 9·2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6번째 회담으로 한중 지도자 간의 돈독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과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여론의 관심 역시 증폭되었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크게 한반도 정세, 한중 관계 발전,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공감 △8·25 남북 합의에 대한 긍정 평가 등이며,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중 관계 발전의 성과에 대한 공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 △한중 인문 유대 등 각 영역 협력 확대 추진이었으며, 또한 동북아 평화 및 안정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제안 △동북아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한 협력의 틀 유지·발전 등이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회담은 그 만남의 시간도 짧았고, 서로 간의 주요 의제를 협상 혹은 조율한다기 보다는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재확인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기존 5차례 정상회담 내용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양국의 회담 보도 자료 내용의 차이를 두고 갑론을박하였지만, 외교 행사의 특성상 자국의 입장과 이해를 바탕으로 회담의 내용을 해석한다는 관례를 본다면 그 차이를 과도하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2. 정상회담의 의미

회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중 관계의 위상 변화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을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특별 오찬, 총리와의 연속 회담, 전승절 기념식장에서의 의전 등 중국은 세심한 배려와 환대를 아낌 없이 보여주었다. ‘외교는 의전이 절반’이라는 말처럼 이는 분명 현 정세 하에서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우려가 없지 않았다. 아무리 세계평화라는 포장지를 씌웠다 하더라도 군사퍼레이드가 포함된 정치 이벤트의 속성상 중국의 군사굴기의 의도가 가려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등 국가들의 견제논리가 작동하면서, 다수의 국가정상이 이번 행사에 불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 정상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한 것은 중국에게는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역시 그 내용의 무게감과 상징성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중 정치적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한중 관계는 소위 정냉경열(政冷經熱)로 불릴 정도로 경제관계에 비해 정치·안보적 신뢰가 낮다는 평가였다. 이는 안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구조적 환경과도 연관이 깊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재평가 하였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6차례의 정상회담, 8차례의 외교장관회담, 4대 전략대화 채널 출범 등 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왔다. 또한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중 결정은 그 자체로써 그동안 쌓아온 한중 관계의 정치적 소통과 신뢰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까지 더욱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이번 회담 직전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북 긴장 사태가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집안 잔치를 앞 둔 상황에서 자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재를 뿌린 셈이다. 중국 전략그룹 내에서 북한 부담론이 재점화되었고, 실제 중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물밑 노력을 진행시켰다는 후문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 도발에 관한 주도적이고 원칙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위력과 명분을 과시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있는 중국이지만, 이번 한반도 위기해결 게임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의 원칙있는 한반도 위기관리 대응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고시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한 것은 과거보다는 분명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에 주는 메시지이다. 일련의 정치 이벤트 과정에서 나타난 긴밀한 한중 관계 그 자체가 무엇보다 북한에게는 큰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중 관계가 냉랭한 상황인데다, 잔치 전야에 재 뿌리기로 중국의 대북 인식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양자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특별히 환대하고 이어 함께 열병식을 참관한 것 자체는 북한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양정상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군사적 도발은 상당한 압박과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발현이다. 이번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 측에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동북아 역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8·25 합의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실제로 이번 회담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동시에 정치적 신뢰까지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아 역내 이해구조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우선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공존하는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특성상, 중국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 속성이 변화하기는 힘들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중국에게 북한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게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전략적 자산이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회담에서 북한을 지칭하는 명백한 용어 대신 모호한 표현들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중국의 국제 정치적 이해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인식 차이도 여전히 있다. 한국은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비핵화 혹은 북한 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방점을 두고 동북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처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는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이 우리의 기대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긴밀해진 한중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전략 소통 기제를 활성화시키고, 북한발 위기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가칭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대화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둘째,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잘 활용하여 남·북·중 삼각 협력 사업 확대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이번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가 단기간에 5·24 조치 해제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드레스덴 구상 이후 제기되어온 실천 가능한 남·북·중 협력 사업은 한중 간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확대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황인 만큼,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한중 간 이익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남·북·중 삼각 협력의 아이템 개발과 실질적 실천이 중요하다.

셋째, 미국의 불신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정치적 유대 강화는 미국의 경계와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올 10월 개최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중의 의미와 우리의 전략적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관계 개선의 호기를 잘 살리고, 한·중·일 삼국 공동회의를 적극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에 있어 한국의 조정자 역할과 기능이 제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우리에게 전략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